

소리없는 아우성 2012 희망의 2013을 준비하다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 글머리

올해 낙농산업은 FMD 발생, 원유가현실화 투쟁으로 지내온 작년에 비하면 표면상 평온했다. 특히나 떠들썩했던 다른 축종에 비해 첨예한 문제도 드러난 것이 없어 비교적 조용한 한 해였다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해석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깊게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 올해 낙농육우산업도 어느 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했고 협회는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했다.

특히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입법 발의로 인해 낙농축산환경은 어느 때보다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축산환경문제는 단박에 목장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는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으로 시끄러운 연말을 맞고 있다. 우리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낙농, 축산부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업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대책들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농업에서 차지하는 낙농, 축산업의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우리 낙농, 축산업은 관심권에서 멀리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생산자의 어려움은 산업의 기반을 위협

안그래도 낙농가 수가 줄곧 감소했던 게 보통인데, 구제역을 겪은 지난 해 농가 수는 그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그에 반해 올 들어서는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휴업농들의 경영재개와 더불어, 구제역 발생 이후 우유부족사태를 기해 유업체들의 생산장려로 통계상 그 감소세가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지난 해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원유가현실화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 올 들어 곡물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배합사료가격이 오르고 조사료가격의 폭등으로 낙농경영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육우 농가 또한, 농가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육우와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산 쇠고기는 계속해서 국내 시장점유를 늘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우 값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육우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료값 폭등이 예고되어 있고, 향후 불안심리 때문에 입식을 주저하고 있는 현장의 육우농가들은 사육의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지난 연 말기준으로 육우가격은 회복된 반면 육우송아지 값은 다시 만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 지지부진한 전국단위제도개편 논의

작년 FMD로 인해 원유생산량은 189만톤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구제역 이전 수준인 210만톤으로 추정된다. 우유부족 현상으로 유업체들은 농가마다 원유 증산을 재촉한 것도 모자라 집유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낙농현안의 핵심은 당연히 수급관리 제도. 그 논의의 세월이 짧지 않다.

진흥회의 전국 우유수급조절 실패 이후 2003년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로 낙농산업의 숙원과제인 낙농제도개편 문제가 다뤄졌다. 2003년 낙농발전대책협의회 구성되어 초안작업을 시작으로 2004년 유업체 직결전환이라는 정부대책, 2005년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한 중장기낙농산업발전대책(안), 2005년 말 일부지역에서의 직결전환 시도, 2010년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발표에 이르기까지 매 과정이 첨예한 대립의 연속이었다.

올해 역시 정부가 낙농산업선진화대책을 제시해놓은 상태지만 이전의 낙농대책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정부는 전국단위 원유수급목표를 200만톤으로 설정하고 중앙낙농기구를 신설하여 그 조절권한을 부여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원유수급목표를 200만톤으로 설정하여 구제역 이전 수준인 220만톤의 쿼터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단계적으로 전국집유일원화를 달성해나간다는 계획을

내농은 바 있다. 쿼터관리는 집유주체별로 알아서 하고 수급목표량만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효율적인 전국집유일원화가 이뤄지려면 225만톤으로 추정되는 쿼터 총량과 실제 납유량 간 차이에 해당하는 공쿼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결국 공쿼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쿼터삭감에 대한 부담은 낙농가가 고스란히 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FTA체제 하에서 진정으로 생산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 낙농정책연구소 개소

생산자인 낙농가는 거래교섭력에 있어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낙농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가 된 이유 또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아무튼 각종 규제나 정책의 희생양이자, 경제논리에 의해 소외받아 온 게 사실이다. 생산자의 정당한 주장은 늘 도외시되고 외면 받아왔다. 결코 순탄치 않은 국내 낙농산업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일컫는 이유다. WTO·FTA 체제 등 급변하는 낙농동향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우리협회는 2006년 제2회 이사회에서 낙농정책연구소의 설립 추진을 의결한 이래로 꾸준한 준비 끝에 올 11월 낙농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축산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관련 정책과 논리개발을 위한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주체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낙농가의 의지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주체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낙농가의 의지”

이로써 협회는 보다 전문성과 체계적인 활동으로 충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낙농산업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단체급식확대 노력을 통한 우유 수요처 창출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낙농제도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는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협회가 항상 전개해오던 부문이지만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인도적 차원의 북한어린이(학생)우유지원, 군 급식 용량 확대, 전·의경 우유급식 실

시와 같은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대정부·국회 활동을 통해 제시해오고 있다.

지자체의 학교무상급식 추세와 함께 우유무상급식 문제도 조금씩 문제를 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군납우유급식을 줄이고 가공우유와 주스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바 있다. 다행히도 발빠르게 대처해 현재와 같이 군납우유급식이 유지되었지만, 언제든지 재연될 소지는 남아있다.

■ 육우 및 젖소 송아지값 폭락. 그 피해최소화에 안간힘

올해는 거의 내내 육우송아지가 푸대접이다. 연초에는 각 언론매체마다 ‘만원짜리 송아지’라 하는 통에 문의도 많았고 심지어 올 가을에는 육우송아지값이 꺾값이라며 우상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육우송아지를 가져가는 어떤상인은 농가에게 미안한 마음에 껌 한통 던져주고 가져가더라 하는 게 현장의 이야기였다. 당당히 수입육에 맞서 국내쇠고기 시장을 지키고 있는 육우산업이지만, 한우위주의 정부정책에 번번히 밀리는 신세가 천덕꾸러기 육우송아지마냥 서글프기만 하다.

협회는 육우송아지의 거래 실종과 육우가격 폭락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전국 육우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육우송아지를 입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안정적 수요처인 육우군납이 육우값 상승으로 인한 예산추가와 어려움과 타축종 가격폭락에 따른 군납물량 요구 등으로 난항이 있었으나 협회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물론, 대국회·정부 활동에도 진력하기도 했다.

협회는 한우와 수입육 틈새 속에 약진하기 위해 농협 내 육우전문 판매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매체를 통해 육우고기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보다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의무육우자조금제도 추진에 막바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안하무인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발표로 업계전체 말살 우려

앞뒤 살피지 않고 단칼에 해결하겠다는 듯이 호기를 부리며 내놓은 환경부의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발표와 관련법개정으로 축산업계 전체가 시끄러웠다. 양축농가들이 마치 4개강 사업 수질오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통에 분노를 자아낸 것이다. 현장의 양축가들이라면 저마다 행정규제에 시달려온 터에 이번에는말로 정말 너도나도 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증폭됐다.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주요쟁점이 많지만 낙농을 비롯한 다수의 양축농가에 있어서는 무허가·무신고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가 큰 위협이었다. 무허가축사 농가수와 관련해서 농경연, 농협 등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우리협회에서 자체 팀을 꾸려 현장실태를 조사해봤지만, 사실 전국에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보유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문제는 축산업계 전체의 오래된 고령이슈다. 무허가축사는 그동안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지향해온 정부 정책추진 속에 부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산물이다. 우리의 요구는 현행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을 무조건 합법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벌 완화, 설계비 완화 등의 배려를 통해 축사를 적법하게 전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무허가 축사의 한시적 양성화를 특별조치 해줄 것과 건폐율의 한시적 확대(80%까지), 가설건축물 적용범위의 확대(썬라이트 지붕구조, 철근철골구조물, 축사간 처마 및 지붕연결 부분 허용), 가축사육시설의 축사제한 법령 적용 제외, 무허가축사 철거 및 신축시 정책자금 지원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서를 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직 국토부, 환경부와의 부처협약이 진행 중이지만 모쪼록 차기정권을 통해 오랫동안 양축농가의 발목을 잡아온 무허가축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결국 우리가 중심이다.

2012년이 2011년보단 수월했다고 해서 2013년도 무난하리라는 법은 없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농가들의 몫”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영압박과 높은 수준의 축산환경 규제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의된 원유가 연동제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환경부가 축분뇨법 개정 문제는 축산현실을 잘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 낙농선진화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생산자측에서 제기한 맹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전국단위쿼터제 실시를 주도해나갈 수 있을지... 새해를 맞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아무도 차기정권에서 그 많은 현안들이 일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요행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협회 30년 역사가 말해주듯이,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묵묵히 대응해 나갈 뿐이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스스로 희망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농가들의 몫이다. 모두가 매순간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해안마련에 동참하여주길 바래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나은 낙농육우산업이 되어보자! ☺

